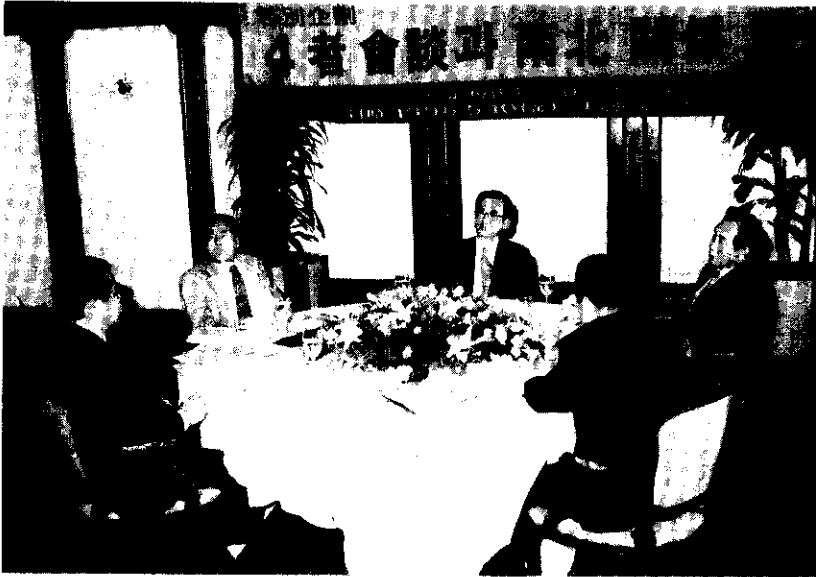


토론회

4者회담과 남북 관계 전망



일시

1996년 5월 10일(금) 오전 10시

사회

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원장

토론

이동복 자민련 의원

이수인 민주당 의원

정재문 신한국당 의원

조순승 국민회의 의원

〈가나다 순〉



김중웅

“우리 정부는 대북 통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북한은 그동안 경제난 해소와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과 직접 평화 체제 교섭 협상을 주장하면서 한국 배제 전략을 추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통일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4자회담은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전기 마련으로써 제기 되었다고 봅니다.”

사회 바쁘신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나 여론을 알려주어,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15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에 각 당의 통일 전문가이시고 앞으로도 통일 문제를 많이 다루실 의원님들을 모시고 ‘4자회담과 남북 관계의 전망’에 관한 토론회를 갖게된 것을 무척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미국의 밥 돌 상원의원이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 문제를 비판하는 발언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 또 남북 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의 해결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한·미·일 태평양민주자위체제를 구축하자”고 선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북미간에 유해 송환 문제가 타결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탈냉전 이후에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면서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대북 통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북한은 그동안 경제난 해소와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과 직접 평화 체제 교섭 협상을 주장하면서 한국 배제 전략을 추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통일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남한의 당사자 해결 원칙, 또 북한의 북미 직접 교섭 원칙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 마련으로써 4자회담이 제기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어떤 제의를 하면 북측은 보통 20 일 내에 즉각 반응이 있었는데, 아직 반응이 없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정 제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마련하는 정부측 입장에 대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4자회담의 배경 의미를 잠깐 짚어 보고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관계되는 한·미·일과 미국·일본·러시아 특히, 러시아가 자기는 배제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입장



정재문

“4자회담의 내용이 우리의 경우 우선 남북간의 합의가 선행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련되는 주변 국가가 이것을 보장하는 2+4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을 한번 짚어보고 남북한의 입장과 앞으로의 남북 관계 그리고 4자 회담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응 정책은 어떤 것인가 하는 3~4가지의 주제로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문 의원님께서 4자회담의 배경 의미와 동북아 신질서 형성과 주변 4국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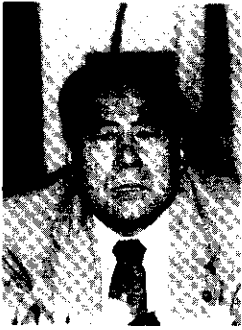
정재문 우선,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국민은 모두 남북 관계의 새 시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4자회담이 되었든 기타의 회담이 되었든, 회담 관계는 지난 10~20년간 어떤 형태로든 많이 제안되었고 몇 차례 회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새시대를 열려고 하면 과거의 일들을 일단 정리하고 새로운 자세로써 어떤 형태든 회담이 이루어져야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 관계는 국내 관련 회담의 내용과 국제 사회 관련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분제에 한정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의 관계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남북 관계가 어떤 형태든 화해 협력되도록 협조하는 자세를 취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외적으로 지난 2,3년간 있었던 북한의 핵개발 시도나 외국에 미사일 수출 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 국가와의 국제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자회담의 내용이 2+4가 되거나 4+2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독일 통일의 상황은 4+2였습니다. 즉, 독일 통일 관련 강대국인 미·소·영·불의 합의 전제 하에서 동·서가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경우는 2+4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남북간에 합의 되었을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련되는 주변 국가가 이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2+4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4+2가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습니



조순승

“4자회담의 발의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이것을 했다면, 한국은 미국에 따라가는 형식이 되어 한국 외교에 있어서 크나 큰 오점이 될 것이고, 또 한국이 주도했다면 한국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다. 지금 러시아도 관계하고 싶어 하고 또 미국 의회에서도 관련 국가들이 먼저 합의하고 따라오는 형태의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나 남북 관계의 미래, 새시대 관계에서는 2+2, 경우에 따라 2+6이 되어, 남북간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순승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승 먼저 현재 극동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외교사적으로 1896년에서 1905년 당시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미소 양대 세력의 축이 어느 정도 무너짐으로써 극동은 강대국에 의한 세력 균형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1896년 당시 한국은 힘이 너무 약해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힘이 커져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4자회담 제의의 많은 부분이 우리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많은 사전 작업을 해놓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로명 외무장관이 러시아에 가서 수상도 못 만나고 왔는데, 이것은 아무 준비도 안해 놓고 툭 터뜨려 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4자회담의 발의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이것을 했다면, 한국은 미국에 따라가는 형식이 되어 한국 외교에 있어서 크나 큰 오점이 될 것이고, 또 한국이 주도했다면 한국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외교진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큰 경각심을

“일단 4자회담이 제의되었고 어떻게든지 성취시켜야 할텐데,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중국에서도 미지근한 의견이 나오며 일본은 자기들끼리 북한에 기자단도 데려가고 사회당하고 접촉하는 것을 보면, 일본은 일본대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를 초월한 지혜를 종합해서 4자회담을 잘 다루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의 외교 수단의 볼모가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가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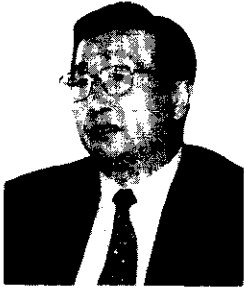
둘째, 4자회담 제의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아젠다를 놓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지 몰라도 3 가지밖에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제4항의 영구 평화 문제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와 제6,7항의 조속한 4자회담 수행을 아무 전제 조건없이 하라는 것뿐입니다. 회담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논의해야 하는데, 당사자끼리의 해결 원칙만 세워놓았지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4자회담이 이루어질 때에는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4자회담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4자회담이 되어야 외교 절차 상에는 맞습니다. 저는 외무부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제가 야당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당 내에서는 4자회담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물론, 북측의 도발 가능성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이 제주도에 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갑자기 제주도에 올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당에서 만든 하나의 연극이 아니었겠느냐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부인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4자회담 제의의 성격 자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심사숙고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의 의견 제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4자회담이 제의되었고 어떻게든지 성취시켜야 할텐데,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중국에서도 미지근한 의견이 나오며 일본은 자기들끼리 북한에 기자단도 데려가고 사회당하고 접촉하는 것을 보면, 일본은 일본대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를 초월한 지혜를 종합해서 4자회담을 잘 다루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의 외교 수단의 볼모가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4자회담 제의는 미국으로서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1996년 11월에 있을 선거까지는 북측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이동복

“4자회담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16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문은, ‘이 회담은 항구적 평화 협정을 이룩하는 과정을 개시하기 위한 것이다. 4자회담에서 광범위한 긴장 완화 조치도 토의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회담의 성격을 표현했는데 굉장히 막연합니다.”

않게 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이런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선거를 위해서 한국이 존재하느냐는 문제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4자회담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밀을 요구하는 외교 정책이지만, 기왕에 4자회담을 제외한 이상 이것을 우리 국익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대세를 좌우하는 문제는 거국적으로 衆意를 합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이동복 의원님께서 먼저 의의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남북 관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항상 그랬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토론 주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바탕 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통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4자회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화제의 대상인 4자회담의 내용에 있어 대부분의 신문이 그 본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자회담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16일 제주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문은, “이 회담은 항구적 평화 협정을 이룩하는 과정을 개시하기 위한 것이다. 4자회담에서 광범위한 긴장 완화 조치도 토의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회담의 성격을 표현했는데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러나 회담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공동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확고한 對韓 안보 공약을 다짐했고 한미 안보동맹 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국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 협정에 의해서 대체될 때까지 현 휴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일은 한국민이 이룩해야 할 과제라는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새로운 항구적 평화 체제를 추구하

“이번 4자회담의 성격은 과거 정부가 여러 차례 제기해온 각종 대북 제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제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4자회담 제의가 갖는 의미는 상대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4자회담 제의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일 난해한 것은 정부가 이것을 절대화시켜서 북한이 절대적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는 것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되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 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에서 “4자회담을 아무 전제 조건없이 조속히 개최할 것에 합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후가 모순되는 것으로서 전제 조건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4자회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발표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4자회담에 있어서 하나의 실현 가능성 있는 제안으로서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용성(acceptability)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나열된 기본 전제 조건을 북한이 충족시킬 수 있으면 4자회담은 성립되는 것이고, 충족되지 않으면 4자회담은 원론적으로 성립이 안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4자회담의 성격은 과거 정부가 여러 차례 제기해온 각종 대북 제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제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4자회담 제의가 갖는 의미는 상대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4자회담 제의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일 난해한 것은 정부가 이것을 절대화시켜서 북한이 절대적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것이 성사가 안되었을 경우 야기될 부정적인(negative) 피드백(feedback)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4자회담을 절대화한 결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미간의 향후 전략 전술을 조율하는 데 발생할 엄청난 문제입니다. 미국은 상당히 상대화한 개념으로 4자회담에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절대화시켜서 접근하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4자회담은 국제 회담으로서 주변 환경과의 함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점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이 제안이 주변 환경이 성숙된 결과로 마련된 것이냐의 여부이고 또

“4자회담의 발상은 4자회담, 6자회담, 2+2, 2+4 등 80년대 말 독일에서 전개되었던 상황을 가상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주변과 한반도 주변의 국제 환경은 전혀 유사성도 없고 연관성이나 공통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은 법적,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국제적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변 환경이 제안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는냐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유사성을 따져서 본다면 작금의 한반도 주변 국제 환경은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9세기 말의 상황과 견줄 수 있지만, 4자회담의 발상은 4자회담, 6자회담, 2+2, 2+4 등 80년대 말 독일에서 전개되었던 상황을 가상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주변과 한반도 주변의 국제 환경은 전혀 유사성도 없고 연관성이나 공통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은 법적,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국제적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2+4가 가능했던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를린 협정으로 4강이 3국이 하나의 파트가 되고 다른 1국이 하나의 파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3국과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선 상에 섰기 때문에 2+4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사실 독일에서는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146조파들이 득세했으면 2+4는 없었습니다. 반면,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흡수 통일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2+4의 개념을 수용했던 이유는, 구소련 내부 정세의 불안정 요소 증폭으로 구서독의 콜 수상은 고르바초프가 있는 동안에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를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에는 이러한 상황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사전적으로 여건 성숙이 안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4자회담을 1995년 8월 15일에 내놓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전에 내밀어 보았다가 북한의 완강한 거부와 중국의 아주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내놓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4자회담때문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4자회담 제의를 이용해서 북한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전술적 입장 정립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국의 입장인데, 중국은

“요즘 언론에서 북한이 이 내용을 수정 제외한다고 하는데, 수정 제외는 그 내용이 수정 가능한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수정 제외지, 그 영역을 벗어나면 수정 제외가 아닙니다. 예상컨대, 북한은 틀림없이 평화 협정 관계는 미국과 하고, 남북간에는 이미 이루어진 기본합의서로 협상하겠다고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을 급가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4자회담을 받아들이면 찬성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즉, 북한이 찬성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찬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북한이 이 내용을 수정 제외한다고 하는데, 수정 제외는 그 내용이 수정 가능한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수정 제외지, 그 영역을 벗어나면 수정 제외가 아닙니다. 예상컨대, 북한은 틀림없이 평화 협정 관계는 미국과 하고, 남북간에는 이미 이루어진 기본합의서로 협상하겠다고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을 급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자회담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도한 4자회담과 다른 회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 제외의 분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거기서 발생할 사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것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것이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이 찬성하면 우리도 찬성하겠다는 것이고, 또 러시아는 지금 능력으로 보아서 끼어들 처지는 아니니까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냉철하게 볼 때 4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괜히 거기에 진지하게 덩벼들어서 후치고 砲질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고, 실익 면에서는 이미 KEDO에 관계하고 있어서 한반도 국제 협의 환경에 하나의 주주 입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우리는 이견이 없다. 찬성한다”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적인 상황을 볼 때, 4자회담의 앞날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4자회담을 작금 우리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절대화시켜서 거론한다면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인 교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인

“4자회담의 가능성 여부 차원에서 벗어나 거시적·역사적 차원에서, 우리 민족 전체의 생명력이 보전·발전되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해보겠습니다. 거시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민족의 역사는 국력 고갈의 역사, 민족 활력 상실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인 저는 4자회담의 가능성 여부 차원에서 벗어나 거시적·역사적 차원에서, 우리 민족 전체의 생명력이 보전·발전되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해보겠습니다.

첫째, 거시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민족의 역사는 국력 고갈의 역사, 민족 활력 상실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을 예로 든다면,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왕조의 교체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豊臣秀吉에서 德川家康으로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을 통해서 그렇게 피해를 보고도 역사적 반성, 역사적 신진대사, 역사적 탄력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1592년부터 400년 동안 완전히 국력 고갈, 국가 노쇠, 민족 활력 상실의 역사를 펼쳤습니다. 마침 대원군시대에 개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개혁은 오늘날 개혁이나 5·18 청산 문제보다 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데, 서원 철페라든가 양반에게 세금 징수 등의 개혁이 그 실례로,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근대 국가로서 자생적으로 뻗을 수 있는 소지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은 개혁 후 개방을 하지 않고 鎖國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호 사건이나 병인·신미 양요를 겪으면서 엄청난 서양 문물의 위력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쇠국을 해버렸습니다. 대원군시대가 1863년부터 1873년인데, 1868년에 일본의 明治維新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개혁해서 그것의 성공을 토대로 개방을 했더라면, 뒤늦게 근대화 개혁을 한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할 리도 만무했고, 그 다음에 망국시대, 식민지시대, 분단시대, 군사독재시대 라는 역사적 노폐물이 한껏 쌓여서, 우리 민족이 엄청난 활력 상실을 소모한 그런 시대는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에 「한국통사」의 저자인 박은식 선생은 대원군의 개혁 실패를 통탄하고, 망국시대, 식민지시대가 바로 그 탓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개혁은 어떠한가. 정권을 잡고 개혁에 나선 시대는 대원군시대하고 오늘의 시대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노쇠하고 국력이 고갈되고 민족 활력이 상실된 시대를 청산할 수

“여기서 남북 대화의 물고를 트기 위해 4자회담을 제안했다는 사실 자체를 자구해석이나 남의 나라 입장이나 한 정당의 입장으로 중시해야 되는 것을 이해하지만, 좁은 시야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 여부를 더 큰 시야로 바라보아야 옳습니다.”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데, 현 정권이 엄청난 개혁 곧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선거법 개정, 공직자재산공개법, 5·18청산을 하고 개방을 못했습니다. 개방의 의미는 우리의 近現代史 100년 간의 최대 과제인 근대 민족 통일 국가의 달성과 관련됩니다. 사실, 분단 민족은 근대 국가, 근대 민족으로서의 자격 조건을 상실한 전 근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엄청나게 민족 전체의 활력이 상실되는데, 대원군시대와 달리 이 개혁시대에 현 정권이 담당하는 역사적 과제가 북한을 개방시키는 것인데, 오히려 5·6공의 極右 강경 정권 세력보다도 훨씬 對북한 강경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더 웅색해지고 남북 문제가 더 풀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남북 대화의 물고를 트기 위해 4자회담을 제안했다는 사실 자체를 자구해석이나 남의 나라 입장이나 한 정당의 입장으로 중시해야 되는 것을 이해하지만, 좁은 시야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 여부를 더 큰 시야로 바라보아야 옳습니다.

둘째, 현실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80년대 후반 탈냉전시대 뒤에 남북 대화는 4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1단계는 1988년부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될 때까지 남북 대화 재개 시기로서, 국회 회담, 고위급 회담 등 각종 회담이 많이 열렸습니다만 북한의 NPT 탈퇴로 중단되었습니다. 2단계는 1993년에서 1994년까지 북한 핵문제를 가지고 한참 격돌을 벌이던 제네바합의 과정인데, 이때 북한의 대미 접근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전연 해소의 기미가 없이 더 경직되었습니다. 3단계는 쌀문제로 1995년 6월부터 9월까지 북경회담이 있었습니다. 15만 톤을 주고 난 다음에 인공기 계양 사건이라든가 청진항 촬영 등 각종 잡다한 사건으로 다시 대화 통로가 폐쇄되었습니다. 4단계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제의입니다. 그동안 통틀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냐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접근을 소홀히 했고 남북 관계는 실패했습니다.

“남북 분단이 우리 민족의 문제이면서 우리 민족의 손을 떠나서 미소의 자의적인 농단 아래 결정이 되었다면, 이제 남북 통일 문제는 국내의 국민적 각성과 국제적 정세에서 냉전체제의 해체 등 모든 면에서 지난 날보다 상당히 상승되었는데, 또 다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실패에 빠져버리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한반도 통일 문제가 앞에서 정재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주도로 이루어지고 주변 강대국이 부차적으로 보장·승인·협력해야 되는 체제로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북미 관계는 접근하는 데 성공을 거두고 남북 관계는 더욱더 실패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한반도 통일이 남북 당사자 원칙 하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 분단이 우리 민족의 문제이면서 우리 민족의 손을 떠나서 미소의 자의적인 농단 아래 결정이 되었다면, 이제 남북 통일 문제는 국내의 국민적 각성과 국제적 정세에서 냉전체제의 해체 등 모든 면에서 지난 날보다 상당히 상승되었는데, 또 다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실패에 빠져버리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4자회담 제의에서 북미회담을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분단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강대국과 우리의 이익 조건이 배치되었을 때,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 희생되었는데, 100년 전의 식민지시대, 50년 전의 남북 분단이다 그런 것입니다. 언제든지 세계사의 대전환이 오는 시기에 그 물결이 동북아시아에 닥치면, 한반도 희생의 법칙이 관철되었습니다. 세계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남북이 주도적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또 다시 강대국이 주도하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 희생의 법칙이 관철될 것이라는 관점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북 대화의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 대화가 한 번 단절되면 2,3년이 지나가버립니다. 그동안 남북 대화는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북미는 그렇게 접근에 성공했습니다. 4자회담과는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이익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는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나가야 되는데 미국과의 공조체제가 깨어졌습니다. 공조체제가 깨어지면 우리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미국이 터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밥상을 차버리는 꼴이 된 것은, 우리 문민 정권이 들어서 아주 중대한 역사적인 오류를

“4자회담 가능성 여부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하기에 앞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자회담 제의에 대해서 일단 전향적으로 북한이 수정 제의할 가능성이 많겠지만, 하지 않은 어떤 변형된 형태라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확고히 트도록 거국적·거당적으로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에 관해 미국과 이익 조건이 일치할 때와 지난날의 고식적 자세에서 벗어나야만, 지난 날 희생이 된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4자회담 가능성 여부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하기에 앞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자회담 제의에 대해서 일단 전향적으로 북한이 수정 제의할 가능성이 많겠지만, 하지 않은 어떤 변형된 형태라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확고히 트도록 거국적·거당적으로 힘을 모아가야 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지금 4자회담 제의가 있는 후, 미국과 일본이 신미일안보조약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미일안보조약을 보면, 최근 새로이 크게 세력화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한편, 새로이 군사력을 확대하는 일본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면이 있습니다. 즉,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미일, 중러 이 두 축 4강에 의한 패권 경쟁 구도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대립 구도는 과거 냉전시대에 있었던 이념적·체제적 차이로 인한 4자 대립 구도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4자 대립 구도라는 점에서, 냉전시대의 대립 구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신질서 형성의 성격 변화에 따른 4강의 對한반도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 관계도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4자회담과 관련해서 주변 4국의 입장과 전략, 남북한의 입장과 남북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제가 남북 회담에 오랫동안 직접 관여했으니까 이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나 남북 관계는 원론적 차원에서 논의하느냐 각론적 차원에서

“각론적으로 말한다면 남북 관계는 우리 혼자하는 게임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50% 이상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도 많은 비판의 대상과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일이 잘 안된 원인의 50% 이상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얘기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거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각론적으로 말한다면 남북 관계는 우리 혼자하는 게임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50% 이상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도 많은 비판의 대상과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일이 잘 안된 원인의 50% 이상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로서 남북한간의 경제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쌍방간의 경제 발전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이 격차의 분기점이 생긴 것은 1962년입니다. 1962년에 우리는 제1차 5개년계획을 시작하면서 국제화로 나갔고, 북한은 1961년에 시작한 제1차 7개년계획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자급 경제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1971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서 김일성 주석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의 표현을 빌면 “1956년에 후르시초프가 우리에게 COMECON(공산권 경제상호원조협의회)의 가입을 권유했는데 안 했다. COMECON이 우리의 원재료를 가져가고 자기들의 완제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인데, 결국 몇년 지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구멍만 뽕뽕 돌린 땅만 남기 때문에, 내가 후르시초프에게 우리는 유치원생이고 당신은 대학원생인데, 같이 놀면 유치원생은 밤낮 질 것 아니냐. 우리는 유치원생으로 살랑살랑 크겠다” 하고 안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그럴 듯하고 일면 호소력이 있어 보였지만, 그러한 북한의 선택이 갖는 모순성 때문에 오늘날 북한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남북한 공히 가지고 있는 자원, 기술, 시장, 자본 등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남한은 국제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갔고, 북한은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즉, 북한은 제한된 자본, 시장, 기술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급 자족하는 길로 나갔지만, 자원 배분을 아주 왜곡되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경제적인 격차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북한

“한미간에 논의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챙겨야 하고, 북미간에 논의 될 문제는 조장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문제는 남북한이 해결해야 되는데 북한이 절대로 남북한간에는 안 한다고 하니 결국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일정한 변화를 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다려주는 인내와 아량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아까 이 교수님이 언급하신 쌀 문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에 쌀을 주라고 합니다만 쌀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북한의 곡물 부족량이 연간 200만 톤 이상이기 때문에 기십만 톤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가 제공한 15만 톤이 국내 시가로 2억 달러 정도이니까 150만 톤이면 20억 달러가 되고, 200만 톤을 다 제공한다면 최대 30억 달러가 매년 소요됩니다. 게다가 북한의 농업이 구조적으로 시정이 안되면 점점 생산성이 악화될테니까, 의존성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쌀문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제도의 개혁이나 농업 정책의 변화 그리고 식량 수급 계획의 정비가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정서적으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각론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한미간·북미간에 논의될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것은 겹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엄밀하게 따지면 삼각형의 각 변 가운데 어느 변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변이 허선으로 또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미간에 논의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챙겨야 하고, 북미간에 논의될 문제는 조장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문제는 남북한이 해결해야 되는데 북한이 절대로 남북한간에는 안 한다고 하니 결국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변하는 만큼 북한도 조만간 변할 것입니다. 북한이 일정한 변화를 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다려주는 인내와 아량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정부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무슨 제안을 내어서 북한을 못살게 굴고 민간은 민간대로 그렇습니다. 자꾸 이러한 프로딩(Prodding: 자극하

“이번 4자회담이 전제 조건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6일에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과의 제주도 회담 자체는 현 시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도를 IPU 회의장에서 보았는데 국제 사회에서의 반응을 보면, 4자회담은 국제적인 조류에 따라서 성사되어야 된다는 기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는 행위)은 북한의 변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재문 저는 4자회담이 잘될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4자회담의 주목적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또 우리가 바라는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어의 선택이나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4자회담이 전제 조건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6일에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과의 제주도 회담 자체는 현 시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4자회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4者’는 휴전협정에 실질적으로 서명한 국가들입니다.

제가 그 보도를 IPU 회의장에서 보았는데 국제 사회에서의 반응을 보면, 4자회담은 국제적인 조류에 따라서 성사되어야 된다는 기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북측이 거부했을 때, 우리측의 문제보다는 북측의 문제가 앞으로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대국의 입장도 종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무관심을 표명한다든지 일본이 자세한 말은 안하고 미일간의 새로운 방위체제를 운운하는 것은, 중국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보에 관련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측에서 수정 제의를 하든 어떤 형태의 회담에 응하든 4자회담은 일단 한번은 개최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거기서 북미 회담을 하든 우리끼리 회담을 하든, 한번 회담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국제 사회의 분위기나 북측의 실정을 볼 때, 북측이 4자회담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4자회담은 성사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외교의 정수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말을 전혀 안들으니깐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말 안 듣는 북측으로 하여금 말을 듣게끔 하는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따라 우리도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해야 할텐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정재문 통상 북측은 즉각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4주가 넘도록 반응이 없습니다. 남북 당사자간의 문제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측이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무슨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일단 4자회담은 한번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순승 아까 남북 관계의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이신 이동복 의 원께서 남북간의 관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문외한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외교의 정수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말을 전혀 안들으니깐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말 안 듣는 북측으로 하여금 말을 듣게끔 하는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측에서는 안보 문제와 경제 협력 문제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나진·선봉 지역에 한국이 왜 투자하지 않느냐, 왜 대기업들이 안들어 오느냐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측에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주기 전에는 경제 협력을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외교사적으로 보아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충돌될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 문제를 선행시킴으로써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능주의로서 고대부터 시작했던 외교 방식의 정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손해볼지도 모르고 북한에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서 들어가면 장차 정치적인 문제도 안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자회담 문제는 내가 북측 대표라고 해도 바로 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년 11월에 있을 미국 선거에서, 지금은 밥 돌 의원에게 25%를 이기고 있다고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만일 한국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것을 잘 알고 긴장의 고조를 암암리에 미국에 시사함으로써, 얻을 것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 외무부가 그렇게 했더라면, 문제 해결이 잘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자회담 문제는 내가 북측 대표라고 해도 바로 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11월에 미국 선거가 있는데, 지금은 밥 돌 의원에게 25%를 이기고 있다고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만일 한국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북측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38선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적어도 긴장의 고조를 암암리에 미국에 시사함으로써, 북한은 얻을 것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측에서 쌀 3,000 톤을 빨리 원조해 달라고 하는데, 이 3,000 톤외에도 물밑에서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지 않는다면 북측에서 그렇게 쉽게 4자회담에 응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문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쥐고 시작한 4자회담에서 성과가 없으면, 그는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북한에서는 시간을 좀더 끌어가면서 얻을 것은 다 얻은 다음에 회담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수정 제의를 해서 며칠 더 끈다든가, 거부한다고 하다가 수정 제의를 낸다든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조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고 서둘면 서둘수록 우리가 발목을 잡힐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북측의 태도를 본 후 우리의 태도를 정해야지, 그 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북측에 끌려가는 형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북측이 4자회담을 하지 않겠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측의 국익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것이 北美 회담이고 그 다음이 北日 회담입니다. 제가 IPU로 평양에 갔을 때, 김영남이 “남한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국교가 수립되면 일본은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미국, 일본과의 국교가 수립되어 있으

“김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4자회담 제안은 러시아의 6월 선거 및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득이 될 수 있고, 미국의 11월 선거나 중국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득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담에는 날짜, 장소, 목적이 중요한데, 지금 4자 회담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것은 언젠가 북측에게 유리한 날짜를 택하고자 하는 속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면 북한의 경제 부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한국 대표들에게 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그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남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회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북경에 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십중팔구 러시아와 중국이 북측에 4자회담을 급하게 수용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외무부 장관이 미리 알아서 전초전을 폼쳐야 하는데, 뒷장구를 치니까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4자회담은 성사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4자회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문 김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4자회담 제안은 러시아의 6월 선거 및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득이 될 수 있고, 미국의 11월 선거나 중국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득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정치 일정을 보았을 때, 7월 8일 김일성 사망,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8월 15일 광복절,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회담에는 날짜, 장소, 목적이 중요한데, 이러한 중요 정치 일정 속에서 북측이 지금 4자회담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것은 언젠가 북측에게 유리한 날짜를 택하고자 하는 속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 이 교수님께서 4자회담의 성격을 역사적 시각에서 말씀해주셨고 또 조 의원님이나 정 의원님이 정치 일정까지 말씀해주시면서, 남북 관계 입장, 접근 방법, 전략을 말씀해주셨는데 미시적으로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인 제가 일본 학자의 논문을 보았는데, 2010년에는 중국의 총GNP가 일본을 웃돈다고 합니다. 또 미국 학자의 논문을 보니깐 202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미·일·중·러 주변 4강이 이미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로서 바라보는 입장이 하나 있고, 구체적으로 남과 북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는 남북이 통일되어 일본의 위협적인 잠재적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4자회담을 운운하지만 크게 보아서 동북아 신질서가 구축돼버리면 열강이 현상 유지를 바라지,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로 중국의 물적 성장의 토대, 잠재력,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1995년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3%인데 중국은 11%입니다. 과열 경기, 과열 성장일지 모르지만,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성장 속도에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고 거기에 대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1995년 6월에 이등휘 臺灣 총통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미 예견된 것이 1996년 3월 최초의 총통 선거입니다.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본다면,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美日은 臺灣을 중국 대륙에 절대로 귀속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만을 독립 국가화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분명합니다. 물론 전쟁까지는 절대로 가지 않겠지만, 이등휘 총통 방문 당시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또 최근까지도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총체적인 결론으로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일 3강의 亞太시대 패권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아야 합니다. 亞太시대에서는 어떤 논문에 의하면, 2020년 정도되면 세계 GNP의 50% 이상이 아니라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유라시아시대’ 라는 말이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잠재적 성장 능력을 포함하면 70%를 웃돌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미·일·중·러 주변 4강이 이미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로서 바라보는 입장이 하나 있고, 구체적으로 남과 북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는 남북이 통일되어 일본의 위협적인 잠재적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4자회담을 운운하지만 크게 보아서 동북아 신질서가 구축돼버리면 열강이 현상 유지를 바라지,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북아 신질서 구축이라는 것은 亞太시대가 세계중심시대를 뜻하는 것인데, 영국 중심의 시대인 유럽시대에서 아메리카대륙시대로, 다시 亞太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

“남북 관계의 진전이 없을 때는 북한과 미·일·러의 관계가 급진전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 남한은 고립되고 아무 주도적인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4자회담이 성사돼도 주변 4강의 신질서 구축 과정에서 남한의 발언권이 약화되어 통일도 안되고 항구적인 분단체제로 남을 가능성이 큼니다.”

간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하는 고리인데, 여기에 어떤 모습이 들어서느냐 하는 것이 주변 4강의 가장 절실한 관심사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한이 경제적인 물질 토대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성은 남한이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남한이 북한을 포용적으로 생각해서 주도성을 갖고 북한은 부차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남북이 같이 접근하지 못할 때는 사실상 4강과의 관계 그리고 북미·북일·북러의 관계가 아주 급진전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은 고립돼버리고, 아무 주도적인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남북 통틀어서 바람직하지 않고, 4자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남북 주변 4강의 신질서 구축 과정에서 혹은 신질서가 구축된다면, 발언권이 약화되어 통일도 안되고 항구적인 분단체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남북분단체제라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냉전체제 최초의 제물이요 최후의 유물로 남아 있는 마당에, 동북아 신질서가 세계 질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상 유지가 어느 정도 계속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남북통일 문제는 ‘역사적 영구 미제 사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각론적인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북한에 체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데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北美 접근을 통해서 북한을 ‘연착륙’ 시키면서, 미국의 지도 아래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국제 관행을 학습시켜주고 끌어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북한이 자기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북한을 개방 쪽으로 유도할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거론하는 것보다 지난 역사적인 사건의 예로서, 1988년부터 1992년 사이에 노태우 정권의 7·7선언과 북방 정책을 들겠습니다. 이것은 노태우 정권이 잘 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고, 여기서 획기적으로 구소련,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권과 수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는 언젠가 해결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환경을 현실에 맞게끔 끌어들이서 지원해주면, 결실을 볼 것이라고 거시적으로 전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4자회담이 거기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메커니즘이냐, 아니면 4자회담과는 별개의 포물러나 메커니즘도 있을 수 있다는 여유를 가지고 4자회담을 보아야 하느냐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고 중국과는 1992년에 수교한 것도 마찬가지로 범주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라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앉아서만 기다린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조순승 의원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예술이 외교’라고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능동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도록 남한이 북한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참고로 아까 중국의 잠재력을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세계은행에서 2020년 세계 7대 강대국을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 4위 인도, 5위 독일, 6위 한국, 7위 인도네시아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아시아시대라 하고 체제와 이념의 대립구조에서 경제 이익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6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통일을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4자회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간 내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동복 의원님께서 국제 관계와 남북 관계를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는 언젠가 해결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환경을 현실에 맞게끔 끌어들이서 지원해주면, 결실을 볼 것이라고 거시적으로 전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4자회담이니까 이 회담이 거기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메커니즘이냐, 아니면 별개의 포물러나 메커니즘도 있을 수 있다는 여유를 가지고 4자회담을 보아야 하느냐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978년 정월에 카터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반도 3자회담의 경우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1978년 3월에 티토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카터가 3자회담을 제안하면서 남한은 자기가 설득할테니까 평양은 티토 당신이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 당

시에 김일성 주석이 티토를 굉장히 따랐고, 티토 대통령도 김일성을 애지중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티토의 건강이 나쁜 것을 알고, 비동맹운동의 3 거두 가운데서 수카르노도 네루도 없어졌기 때문에, 티토의 환심을 사서 그가 세상을 떠나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티토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아주 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티토는 김일성에게 그런 계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동방의 사회주의 진영의 초소’를 맡고 있는 김일성 주석이 자기한테 잘 하니까 김일성에게 특별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터는 티토한테 그것을 부탁해 놓고 AP에 그 기사를 흘려 전세계에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북한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티토의 계획은 자기가 베오그라드로 돌아가서 특사를 평양에 파견할 작정이었는데, 보내기도 전에 허정숙이가 나타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직접회담을 원하는 것이지만 남한이 끼는 3자회담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티토가 화가 나서 일을 작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정숙이 유고에서 루마니아로 가서 1978년 4월에 워싱턴을 방문하는 차우세스쿠에게 “티토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카터와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가서 미국과 우리가 직접회담을 하는 것이 우리의 原案이고, 미국이 우리와 직접회담을 하면 그 선물로서 남북연방제를 만들겠다”는 북한측 입장을 카터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차우세스쿠가 워싱턴에 가서 카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터가 대노하여 정상회담에서는 회귀할 정도로 “당신이 북한의 대변인이나”고 고함을 지르는 아주 불유쾌한 장면이 연출되었고 3자회담은 이로써 없어졌습니다. 그 이듬해 6월 30일 카터가 한국에 오면서 박 대통령과 공동으로 3자회담을 공개 제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철군 조치를 백지화할 명분이 필요하니까 북한이 거부하는 것을 알고 북한에 공개 제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북한이 거부하니까 미국으로 돌아가서 철군을 무기한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4자회담은 작년에 고려했다가 회수된 것인데, 다시 제의된 것은 북한이 평화 협정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막아줄 카운터 웨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자회담으로 국제 여론을 동원해서 북한에 역공세를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평화 협정으로 장난칠 수 있는 명분을 박탈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4자회담이라고 하는 회담 형태를 제의함에 있어서도 미국측의 입장에는 그같은 계산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회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고려했다가 회수된 것이고, 게다가 이번 4자회담이 다시 제의된 것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제네바 프로세스가 최소한 11월 선거때까지 잘 가야만 클린턴이 이것을 외교적 업적으로 삼을 수 있는데, 북한이 평화 협정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한다는 말입니다. 군사정전위원회를 없애버리고 비무장지대(DMZ)를 무력화시키고 4월 6일부터 장난하는 것이 제네바 프로세스의 궤도 이탈을 야기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평화 협정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막아줄 카운터 웨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4자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봅니다. 4자회담으로 국제 여론을 동원해서 북한에 역공세를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평화 협정으로 장난칠 수 있는 명분을 박탈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 회담 제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목적은 상당 부분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미국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계산도 그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계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플러스 알파때문에 제주도회담 후에 미국과 우리 대통령의 설명에서 뉘앙스의 차이가 생기고 있고, 우리는 미국보다는 이것을 좀더 절대화시키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문제의 앞날을 생각해보아야만, 4자회담이 성사되면 좋고 성사되지 못했을 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위한 방안과 전략에 대해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송 흔히들 남북 문제는 ‘당사자간 해결 원칙’이 앞서야 한다

“남북간의 문제는 4자회담 같은 것이 없어서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2보다는 2+4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국제적 회답이 있다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국제 문제화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국익이 손상되지 않게끔 국제 문제화시켜야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고 합니다. 안명근 교수에 의하면 'Koreanization of a Korean Problem' 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듣기는 좋은데 당위성의 문제이지 과연 한반도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단도 원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국제 문제화가 되지 않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제 문제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주변 국가들이 우리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문제는 4자회담 같은 것이 없어서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2보다는 2+4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국제적 회답이 있다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국제 문제화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국익이 손상되지 않게끔 국제 문제화시켜야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때 외교관들에게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콩그레스 비엔나가 1814년부터 있었습니다. 한국과 똑같이 4대 강국이 불란서를 분할한다고 했을 때, 타레랑은 이것을 국제 문제화시켰습니다. 콩그레스 비엔나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 인물인 메테르니히치를 붙잡고 늘어져서 통일 불란서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패전 국가이면서 알사스 로렌 지방까지 영토를 확장한 외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에게 남북 관계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 남북회담에 대해서 외무부 차관 정도가 계속 관계하고 있는 정도이고, 계속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남북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남북 문제는 남북뿐만 아니라 주변 4대 강국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4든 2+2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되어야지, 북측이 원하는 2+2가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측에서 우리가 이번에 제의한 4자회담을 완전히 부정해

“전체로 봐서 앞으로 2~3년이 참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체제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인내하고 양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양보의 기준은 김정일 정권이나 김정일 후의 정권에 대한 양보가 아니고, 북의 우리 동포들을 위한 양보이어야 합니다.”

버린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수정 제의나 기타 안을 가지고 국제 문제화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좀더 예지를 모아 활용해야 합니다.

사회 정 의원님께서 대응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문 저는 부정적인 자세보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남북한의 문제는 비관적이 아니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인 휴전협정을 계속 지킨다는 문제는 전후 세대에게는 입장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고치는 것은 북미 당사자간의 문제요, 국제적인 문제라고 보고, 1992년 2월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협정 자체도 4차회담이 잘되면 2+2나 2+6으로서 보장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로 봐서 앞으로 2~3년이 참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체제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인내하고 양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양보의 기준은 김정일 정권이나 김정일 후의 정권에 대한 양보가 아니고, 북의 우리 동포들을 위한 양보이어야 합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앞으로 2~3년 동안 남북한 문제가 현재의 분단 상태로 유지되더라도, 군사적인 대립이 완화되고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우리 국민, 국회,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화체제는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수인 교수님께서 전략과 관련하여, 남북 문제 내지 통일 문제를 정치 이슈와 연계시키는 것은, 민족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과 접근 방법에 있어서 정경 분리 원칙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갖는 가장 치명적인 의구심은 흡수 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지 않으면 북측에서 절대로 변화할 리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북측의 체제 위기가 엄존하고 있고 흡수 통일될 가능성도 있지만, 흡수 통일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용어조차 우리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깊이 감추어 두고, 북측의 우려를 어떻게 걷어내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는 양시각의 장단점을 생각해서 대응 전략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인 저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남북 문제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것은 초강경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흡수 통일’이란 말이 언론, 학자, 당국자의 입에서 많이 나왔는데,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갖는 가장 치명적인 의구심은 흡수 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일반적인 얘기이고 제 개인 생각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이동북 의원께서 변화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지 않으면 북측에서 절대로 변화할 리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북측의 체제 위기가 엄존하고 있고 흡수 통일될 가능성도 있지만, 흡수 통일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용어조차 우리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깊이 감추어두고, 북측의 우려를 어떻게 걷어내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경 분리 문제는 큰 시야로 보면 마치 봉건영지주의 분열 세계를 자본의 힘으로 근대 국가, 근대 민족으로 탄생시킨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세금, 도량형, 화폐, 행정 규제가 봉건 영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발전하는 데 번거로웠습니다. 근대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이 사회 인문 분야에 투영된다든가 하는 것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자본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근대가 탄생한 이후 200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바뀌는데, 민족 국가의 장벽을 뚫는 脫근대시대를 또 자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정보 통신, 교통 혁명이 이루어지고 이 지구상의 오지까지 전부 개발되고 있고, 각종 국가적인 장벽을 뚫고 전 세계를 단일화하는 추세를 자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의 구체적 예는 독일 통일의 경우인데,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과 기술이 영향을 미쳐야만 된다는 것으로서, 국가 체제 장벽을 없애는 마당에 자본이 진출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업의 북한 투자 규모가 몇건의 예외

“독일 통일의 예에서 교훈 삼을 만한 것이 있다면, 베를린 장벽을 뚫는 원천은 구동독의 지도부가 통일이 되더라도 아주 극좌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통일 독일에서도 살아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적인 신념으로 바뀐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는 있지만 500만 달러인데 이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자본이 들어가면 자기들 생활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험차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측에 양질의 노동력이 있고 노동조합이 없는데, 거기에 대기업이 들어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규제 장치를 뚫고 자본이 들어가서 교섭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북측과 주고 받으면, 친화력이 생기고 훨씬 경계심이 적어져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독일 통일의 예에서 두번째로 교훈 삼을 만한 것이 있다면, 베를린 장벽을 뚫는 원천은 구동독의 지도부가 통일이 되더라도 아주 극좌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통일 독일에서도 살아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적인 신념으로 바뀐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자본의 진출과 생존할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규제 장치를 점진적·획기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 없으면 안됩니다. 북미 접근을 하면 미국이 엄청난 진출을 하게 될 것이고, 일본도 한반도 통일에 잠재적인 반대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계은행에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우리의 잠재력이 세계 6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도 좋고 시베리아의 영하 40도 혹한에서나 영상 40도의 사막에서도 일을 하는 강인한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남북한 등거리 외교로 두 개의 카드를 항상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북한에 엄청난 진출을 하게 되면, 남북한 통일의 앞날은 정말 불투명해지는 큰 요인의 하나를 만들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또 중국은 이미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놀란 것은, 벤츠, 볼보, BMW 등 고급 자동차들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낙후한 경제 속에서 회사 선전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싶어서 종합상사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5% 정도의 중국인은 한국의 재벌 총수급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하니

“우리는 적어도 GNP 규모에서 10 대 1의 능력과 토대가 있기 때문에, 민족 내부의 주체적인 힘과 주동적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4자회담이 그대로 수용되든 또 변형될 가능성과 시기 상의 지연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형태든지 4자회담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은 남북 대화를 힘차게 추진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다. 5%면 중국의 인구를 13억으로 잡아 남북한 인구에 해당되는 6,500만 명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일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될 것이며, 북한이 체제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 생존을 지탱해줄 때 통일은 안된다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꼬리를 무는 체험과 思考의 엄청난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미국에 맞설 정도의 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GNP 규모에서 10 대 1의 능력과 토대가 있기 때문에, 민족 내부의 주체적인 힘과 주동적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4자회담이 그대로 수용되든 또 변형될 가능성과 시기 상의 지연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형태든지 4자회담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은 남북 대화를 힘차게 추진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경직성은 전부 인정하지만, 끝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자세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공정권 때 사회주의권과 수교할 때, 북한은 고립되어 있었고 적대적인 반감이 극도에 달했을 때도 「남북기본합의서」가 창출되었기 때문에, 이동복 의원님의 앉아서 기다린다는 말씀은 조금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냉전체제가 완전히 해체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역사는 결코 낡은 시대를 새롭게 복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극좌 세력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듯이, 남한의 극우 세력도 비록 소수지만 오랫동안 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양쪽의 극좌 극우적인 것은 상호 존재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극우가 강력히 발호하려면 극좌의 존재가 필요하고, 북한의 극좌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극우의 존재가 필요한 시절은 다시는 복원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필연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북 대화의 물꼬는 트일 것입니다. 시기의 완급 문제는 있지만, 미·일·중·러시아의 접근을 방관하지 말고 남한도 아주 힘차게 접근하고, 다시 한번 강조컨대, 냉전체제 최초의 제물이고 최후의 유물로

“통일 분위기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북측과 협력함으로써 정치적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북측에서는 쌀과 경제 문제로 나진·선봉에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남포항도 개방하고 있으니, 지금이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아 있는 이 마당을 우리가 냉정히 직시해서, 남북 통틀어 남한의 주동성이 확보된 이 마당에 우리 민족의 존엄성과 활로, 한민족의 번영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문화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이 현 정권과 각 정당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봅니다.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통일 문화입니다.

현 정권은 통일 문화의 확산을 초강경 정책으로 일관해서 북한과의 대화 단절, 흡수 통일에 대한 의구심, 미국 일본과의 공조체제가 깨진 외교적 마찰 등 참으로 우려할 만한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4자회담을 기틀로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5,6공보다 훨씬 더한 초강경 노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정재문 의원께서는 4자회담에 대해서 스스로 낙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위론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확보하지 않으면 열정이 절대로 치솟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인 낙관을 토대로 전술적인 비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 구상, 열정의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재문 지금 북한과의 교역 상대로 우리가 제3위라고 하는데, 그것은 벌써 많이 달라진 증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양보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 통일의 차원이 아니고 결국 우리 민족의 번영이 최대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과 앞에서 김중웅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세계에서 우리가 6위가 된다는 것이 바로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조순승 우리도 낙관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텐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경분리원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북측과 협력함으로써 정치적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북측에서는 쌀 문제와 경제 문제로 나진·선봉에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남포

“4자회담은 얼른 생각하기에,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휴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이기 때문에, 4자회담이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와 국가 입장에 엄청난 훼손을 가져올 요인이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반도 전쟁의 당사자가 물론 남북한이고 그 다음은 미국이 아니라 유엔 참전 16 개국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변질·훼손시킬 발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향도 개방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4자회담이 추구하는 목적이 미국과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른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데, 낙관적인 가치관을 가졌을 때는 새로운 힘이 솟고 국민의 컨센서스를 얻어서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 구체적 경험이 많으시니까 결론으로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거시적 또는 미시적 입장에서 매듭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4자회담은 형태나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자회담은 얼른 생각하기에,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휴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이기 때문에, 4자회담이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와 국가 입장에 엄청난 훼손을 가져올 요인이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반도 전쟁의 당사자가 물론 남북한이고 그 다음은 미국이 아니라 유엔 참전 16 개국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변질·훼손시킬 발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한 클라크 장군은 미군 사령관의 자격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참전 16 개국과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유엔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협정의 조인 당사국으로서 미국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4자회담을 설명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엄청나게 묶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4자회담을 절대화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자회담과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합의의 도출이냐 아니면 도출된 합의의 이행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 평화

“그런데 우리에게 일종의 묘한 국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의할 때까지는 편달하지만,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또 새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해 놓은 것을 또 합의하는 악순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번 4자회담도 1992년에 합의된 「기본합의서」와 함수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평화체제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로 해결된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남과 북은 현 停戰 상태를 남북 사이에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이행 대책을 담았다고 하는 남북 화해 이행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8조를 보면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한 사이에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한의 화해 불가침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라고 합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 준수하면 평화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또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에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공고한 평화의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종의 묘한 국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의할 때까지는 편달하지만,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합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의 이행 쪽의 편달은 완전히 제쳐 놓고 또 새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해 놓은 것을 또 합의하는 악순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번 4자회담도 1992년에 합의된 「기본합의서」와 함수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내적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4자회담이든 기본합의서의 이행이든 그 목표는 북한의 ‘연착륙’입니다. 그런데 연착륙의 의미가 김정일체제를 안정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일체제나 정책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김정일체제가 코끼리 무너지듯이 넘어져 ‘뺑’ 하고 지축을 흔드는 동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막아야 된다고 보다는 여기에 대한 지혜를 결집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착륙은 무엇때문에 하는 것이냐는 차원에서 정경 분리 원칙이 나오는데, 정경 분리가 안되는 원인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원인은 북한에게 있습니다.”

연착륙은 무엇때문에 하는 것이냐는 차원에서 정경 분리 원칙이 나오는데, 정경 분리가 안되는 원인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원인은 북한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진 선봉 얘기를 합니다만, 김정우가 작년 12월에 뉴욕에 와서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다 잘 알고, 이미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줌발트팀과 타임라이프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 개방이 안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진 선봉에 인프라스트럭처가 되어야 하는 것과 북한의 신용이라는 것이 외부 투자에 대한 회수 보장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을 남쪽이 해주어야만 외국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북일 국교 정상화 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였던 나카히라 대사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북한 시장을 일본이 선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어렵겠는 얘기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동안 몇번 당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서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평양에 가면 보통강여관이나 평양여관에 일본 사람들이 투숙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일본과 북한과의 국교가 정상화되었을 경우에 일본의 공공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것의 집행 참여시 북한의 카운터 파트를 미리 정해서 침을 발라 두기 위한 것이지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일본의 공공 자금이 북한에 들어갈 때, 그것은 ‘Buy Japan’ (즉, 일본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단서)이 적용되는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남한이 프라임(prime)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프라임으로 들어가고 한국이 서브(sub)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이 북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남한을 추월한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남북 경제 협력의 기본 형태에 임가공 무역이 있습니다. 임가공이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인데 두 가지 큰

“또 남북 경제 협력의 기본 형태에 임가공 무역이 있습니다. 임가공이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인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노임체계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받는 임금을 노임으로 보면 안되고, 식량 등 무료로 배급되는 것을 노임에 가산해야 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엄청난데 많은 유향 노동력이 잉여 노동력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노임체계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받는 임금을 노임으로 보면 안되고, 식량 등 무료 배급되는 것을 노임에 가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것만 노임으로 계산하니까 60 달러인데, 이 정도의 노임을 받는 노동자는 별로 생산성이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서 임가공한다고 했을 때, 100~200 달러 준다고 하면 북한 노임과의 차액 부분이 인센티브로 작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당국에서 노동자들에게 주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파급 불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떼고 본인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임가공 무역의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처음 한두 번 제품 납품 때는 납기도 지켜지고 양질의 제품이 나오는데, 두세 번 후에는 납기도 지켜지지 않고 품질도 떨어집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똑같아지니까 노동 생산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에 잉여 노동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에 유향 노동력은 엄청난데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 설비 가동률이 28%이므로 나머지 72%의 유향 장비를 근작하는 근로자들은 유향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설비에 관련되지 않은 노동력도 많은데, 이것이 잉여 노동력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잉여 노동력화되면 북한의 경제 계획이 잘못된 것을 정치적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그동안 여러 해가 걸렸던 기관의 건설, 남포댐의 건설, 평양 락원거리의 아파트 건설을 전부 군인이 했거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향 노동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을 동원하는 것은 유향 노동력을 잉여 노동력화 할 수 없는 정치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임가공을 통한 남북간에 의미 있는 경제 협력을 하려면 대규모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변화가 내부적으로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

“북한이 일본과 국교정상화가 필요한 것은 북한이 일본에서 소유하고 있던 학교 130 개를 판 돈을 북한으로 들여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절대로 미국과의 국교 수립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북한은 지금 미국을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국교가 수립되면 일본과도 될 것이고, 그 돈을 가져오면 일단 자본 투자의 제1단계는 이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 정경 분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조순승 제가 IPU로 평양에 갔을 때, 금강산에 올라가면서 북측 대표에게 “왜 미국 일본과 접촉하면서 남한과는 접촉을 안하느냐, 남한과 접촉해야 우리 돈이 북한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사람은 “조 박사! 답답합니다. 일본과 접촉하면 얼마만큼의 경제 원조를 해주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학교가 136 개가 있는데 6 개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팔았을 경우, 그 돈을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절대로 미국과의 국교 수립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을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국교가 수립되면 일본과도 될 것이고, 그 돈을 가져오면 일단 자본 투자의 제1단계는 이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복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시각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경제를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 평가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북한의 경제는 '3중 경제'입니다. 제1은 국가 경제인 인민 경제이고, 제2는 군사 경제이고, 제3은 코트 경제입니다.

국가 경제라고 하는 인민 경제는 제가 보기에 이미 파산되어서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989년부터 북한이 발표하는 연평균 4.5%의 성장을 보여주는 예산입니다. '연평균 4.5%'는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 증가는 물가 상승률 + 국민 생산 증가분 + 투자분인데,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4.5% 증가의 예산을 매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5월이 되었는데도 예산이 발표되지 않고 있고,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 경제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북한 경제를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 평가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북한의 경제는 ‘3중 경제’입니다. 제1은 국가 경제인 인민 경제인데 이미 파산되어 없다고 보여지고, 제2는 군사 경제인데 독자적인 경제 단위이고, 제3은 ‘내탕금 경제’. 영어로는 코트 경제(Court Economy)라 하는데 노동당이 관리하는 경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밑수, 아편 재배, 삼각 무역 등 지하 경제성 경제 행위입니다.”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제2경제라는 군사 경제는 모든 공산권이 다 그렇지만, 독자적인 경제 단위입니다. 거기에는 군수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재 산업과 전자 산업도 있습니다. 군은 무기를 수출해서 받는 대금을 국고로 회입하지 않기 때문에 지탱이 됩니다. 이 무기 수출이 한 때 15억 달러까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몇천만 달러밖에 안되니까 지탱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나머지가 제3경제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내탕금 경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코트 경제(Court Economy)라고 합니다. 노동당이 관리하는 경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밑수, 아편 재배, 삼각 무역 등 지하 경제성 경제 행위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지금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부 이 경제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경제로 환입되는 경제 행위가 아니라, 현금성 경제 활동입니다. 그것으로 북한의 정권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경화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고, 일본의 학교를 팔아서 가지고 들어가려는 돈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거의 공공성 경제는 포기하고 있고 정권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화성 경비의 조달에만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체제 문제가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서, 다시 공공 정책 부분이 지하성 경제를 안아들이는 변화가 일어나야만 의미있는 정경 분리가 이루어지지, 지금 정경 분리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인 4자회담과 관련됩니다만, 2년 전에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가 중국중시주의 편향 발언을 해서 많은 물의를 빚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체제가 파동이 일어난 것이 사실인데, 이번 4자회담을 통해서 적어도 통일될 때까지는 미국과의 공조체제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익이 일치되는 한, 절대적이고 참다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자회담의 의미를 완전한 공조체제의 회복과 강화라는 점

“남북 관계 개선은 「남북 기본합의서」를 토대로 계속성 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번 4자회담의 조건도 공정하게 마련하고 공개적으로 내놓아, 우리 국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도 그것을 받아들일도록 해야 합니다.”

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동복 의원님께서 4자회담이 변형되든 안되든, 어떤 식으로든 남북 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하므로, 이왕에 이루어졌던 「남북기본합의서」 사항들의 실천을 4자회담 또는 변형된 4자회담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한다면, 오늘 이동복 의원님과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전부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복 그렇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계속성 선 상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4자회담의 조건도 공정하게 마련하고 공개적으로 내놓아, 우리 국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도 그것을 받아들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걱정스러웠던 것은, 이상하게 현관을 놔두고 뒷문으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남북 관계를 위해서 백해무익합니다. 모든 남북 관계는 정면으로 정문을 통해 정공법으로 다루어야 북한의 필요한 변화를 우리가 자극하고 촉구하게 되는 길인데, 자꾸 이것을 정문을 놔두고 뒷문을 통해 다루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오늘처럼 4자회담의 성격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나 평가, 또 앞으로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언론이고 어디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5대 국회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국회요, 통일을 준비하는 국회입니다. 제가 마음 뿌듯한 것은 오늘 나오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느 분보다도 전문가이신데, 오늘의 결론을 공유하시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통일 정책 대안을 15대 국회에서 더 활발히 진행시켜서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진지한 토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完**